

● BK21 사업단 실태 조사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2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두뇌한국(BK)21 사업단장 회의를 열고, 최근의 BK21 사업 지원금 유용 논란과 관련, 실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술진흥재단 공동으로 4개 팀을 구성해 전국 386개 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위법 사례가 적발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BK21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 2001년도 대학졸업자

취업률 집계·발표

교육인적자원부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4년제 대학 47개 대학과 40개 전문대학 취업 담당자를 설문 조사한 결과, 2001학년도 2월 4년제 대학 졸업자 25만8천767명 중 진학자(대학원이나 다른 대학 진학) 3만360명과 입대자 3만4천40명을 제외한 12만4명만이 취업해 취업률이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취업률 56%보다 3%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 56.1%의 취업률을 보인 반면 지방대는 이보다

4%포인트 낮은 52.0%에 머물렀다. 전문대 졸업자 취업률도 지난해(79.4%)보다 7%포인트 이상 떨어진 72.05%에 그쳐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간호학과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무역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산업디자인, 영어영문학, 의학, 전기공학, 등의 학과는 65~85%대의 취업률을 보인 반면 교육학과 국어교육 등 사범교육학 계열과 문헌정보학, 사학, 사회학 등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은 29~43%대에 그쳤다.

● 사립대 재산처분권 대학

설립자에게 부여 예정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1일 학생 수 부족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대학 운영이 한계에 달한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이 열악해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현재 공익재산으로 분류돼 처분권이 국가에 있는 사립대학 재산을 설립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2002년부

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안이 시행되면 교육환경과 취업 등에서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 가운데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교 재산을 공익재산으로 분류하고 사립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기부 채납 형식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설립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특례조항을 신설해 설립자에게 폐교되는 학교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사학법인이 경영난으로 학교 문을 닫을 경우 설립자의 의지에 따라 학교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돌려 받도록 특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등록률과 대학 재정 상태, 교수 확보율, 강의실-실험실습실 확보율 등을 계량화해 평가, 앞으로 정할 기준에 미달되는 대학을 퇴출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대 일부과 3년제 전환

교육인적자원부는 2월 22일 산업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현재 수업 연한으로는 수준 높은 직업 기술 인력 양성이 어려운 학과에

대해 수업 연한을 1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자격이나 직무 능력 기준이 상향조정된 건축학과, 4년제 대졸자와 구별 없이 국가자격 기준이 동일한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정보기술(IT)분야의 인터넷정보학과, 전자공학과, 전자상거래학과 등 10여 개 학과가 수업 연한 연장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 수업 연한 연장을 위한 세부 방안을 3월 말까지 확정하고, 5월 말까지 대상 학교와 학과를 선정, 고시해 내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부모라도 자녀 대입 성적

열람 못해

대학입시 성적은 공개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모가 공개를 요청했다라도 대학 측이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3월 2일 고모씨가 딸의 의대 입학 당시 성적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10여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씨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가

요청한 자료는 이름 등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는 법이 정한 공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비록 정보 공개 청구인이 부모라 할지라도 대학 측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이 대학 의대를 졸업한 딸의 입학성적과 졸업성적이 큰 차이가 나 장래 진로와 소질 등에 관해 참고하려 한다며 대학 측에 입학성적과 의예과 석차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사립대 예·결산 공개

확대 지침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8일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0 회계년도 결산부터 예·결산 관련 서류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내신문 등에만 예·결산 상황을 공개토록 하던 데서 벗어나 대학 홈페이지와 도서관, 종합민원실, 경리과 등에도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제표 중 예·결산서만 공개토록 했던 제도도 고쳐 예·결산서는 물론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감사보고서 등도 의

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예·결산 현황을 제때 공개하지 않거나 미루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 유사 사이버 대학 '주의령'

지난해 평생교육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9개 사이버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인가를 받고 신입생을 모집, 강의에 들어갔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이버 대학들이 허위 광고로 학위를 받게 해주겠다며 신입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씨가 신입생으로 지원했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았던 '사이버 국제대학'에 대해 최근 '대학'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이버 국제대학은 이에 따라 최근 명칭을 '국제 사이버 캠퍼스'로 변경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e 아카데미 홀딩스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 국제대학'은 국내법상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이 아닌 데도 대학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 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이버 대학 붐을

탄 유사 사이버 대학이나 온라인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명칭 사용이나 광고 내용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인가를 받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은 학사학위 과정이 경희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등 7개, 전문학사학위 과정이 세계사이버대학, 세민디지털대학 등 2개이다.

☪ 의학대학원 2003년 도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14일 2003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도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갑범 연세대 교수) 1차 회의를 가졌다. 추진위는 7월까지 시행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8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 의사 양성 체제는 현행 '의예과 2년+본과 4년'에서 '일반 대학 4년+의학전문대학원 4년'으로 바뀌게 된다. 이 대학원은 일반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의학입문자격시험

(MEET : 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자에게 학위논문 없이 전문성을 인정해 의무박사(MD) 학위를 수여한다. 기존 의대는 모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고교 졸업(예정)자를 선발해 현재 체제와 유사하게 6년간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사 수급 현황을 고려해 의학전문대학원의 정원과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정원의 도입 방식 등을 관련 부처와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현재 치대협의회가 의대와 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길 바라고 있어 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은 시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의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에 치의학 인사를 참여시켰다.

☪ 재임용 탈락교수 소송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일 "2002년 1월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토록 의무화해 재임용 탈락교수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단과대별 또는 학과별로 마련하되 대학본부가 반드시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사실을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수 업적평가는 교육·봉사·연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실시해 그 결과를 승진, 보수, 정년보장 심사에 반영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이렇게 개정되면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일단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여기에 서도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 사법시험법 시행령 공포

사법시험법에 따른 자격 요건과 시험과목 등을 규정한 사법시험법 시행령이 확정, 3월 31일 대통령령 제 17181호로 공포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법시험 응시 자격은 '일반 대학과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내대학, 사이버 대학 등 법률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로 제한돼 2006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

라 앞으로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 서는, 일반적으로 법학 1개 과목이 3학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때 모두 12~13개의 법학 과목을 수강해야만 한다.

시험과목 수는 1차 시험의 경우 제 1, 2 선택과목의 비법률 과목과 제 3 선택과목인 제 2외국어를 모두 폐지, 현행 23개에서 12개로 대폭 줄어든다.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3개 과목을 현행대로 실시하며, 선택과목은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국제경제법 포함), 노동법(사회보장법 포함),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등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도록 했다. 또 어학시험의 경우 제2외국어가 폐지되고, 영어도 토플(TOEFL), 토익(TOEIC), 텡스(TEPS) 등 자격시험으로 대체되어 총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어학 자격점수는 토플은 530점, 토익은 700점, 텡스는 625점 이상이면 된다. 시험과목 변경은 일정기간 유예를 뒤 내년 시험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2002년과 2003년 시험에서는 법률 선택과목 8개 중 1개를 선택하고 어학은 종전처럼 치르며, 영어시험의 토익·토플 등으로의 대체는 2004년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 밖에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4차례) 규정

은 기본권 제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 수도권 전문대·산업대 등 대학 설립 규제

내년부터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전문대, 산업대 등 대학의 수도권 내 설립과 학생 증원이 크게 규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전문대와 산업대, 정원수 50명 이하의 미니대학을 수도권에 설립하거나 학생 수를 늘리려 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3월 11일 밝혔다. 또 신학대학이 대부분인 대학원 대학의 입학생 증원도 수도권정비위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문대, 산업대의 신설은 가급적 불허하고 산업대, 전문대 학생의 증원 규모도 종전 전체 증원의 20% 범위에서 앞으로 10% 범위 내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대학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학생 증원도 어렵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런 방안에 대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고, 오는 6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바꿔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정보기술 인력 유학 지원 대폭 확대

앞으로 IT(정보기술) 분야의 우수 인력이 스탠퍼드, 카네기멜론 등 해외 우수 대학에서 IT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유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IT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선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고급 IT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우수 대학에 대한 해외 유학 지원 규모를 지난해의 50명에서 금년에는 2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정통부가 금년에 선발해 지원하는 인원은 석사학위 120명, 박사학위 80명 등 200명으로 선발된 인원은 석·박사 과정 동안 연 2만 달러 수준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 자격은 연령 제한 없이 토플 550점 이상의 어학 능력과 일정 수준의 전공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대학 성적, 전공 지식 및 학업 계획 등에 대한 서류 심사·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 후 미국 상위 35위권 대학 등의 입학 허가 여부에 따라 확정·선발된다. 정통부는 특히 IT분야에 재능과 소질을 가진 저소득 우수 학생에 대한 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발 규모 대비 상위 130% 이내(260등)에 든 저소득

우수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 마련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20일 교원 수급난 등의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신분 안정과 부족한 담임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 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같이 방학 기간의 임용 및 보수 지급과 함께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임용 여부는 시·도 교육감에게 일임했다.

그 동안 결원을 채우기 위한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됐어도 방학 동안에는 임용 조건이 해지돼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1만 1천 여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는 ▲퇴직 교원 ▲교과 전담 ▲결원 보충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는 5천명 정도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유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도서·벽지의 경우 신분상 불안정으로 기간제 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담임교사도 부족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원 보충 기간제 교사는 지난 '99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학 동안의 보수 지급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계약

조건에서 방학 때의 임용을 제외해 오다 최근 감사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 사이버 무역 교수요원 연수 교육

산업자원부는 국내 대학의 전자무역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교수 2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전자무역 분야 연구 실적과 향후 인력 양성 계획을 기준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들은 상반기 4주간 한국무역협회와 통상정보학회 지원으로 국내 연수를 받고 여름방학 4주간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에서 세계 전자무역 연구 동향과 기법을 교육받게 된다. 산자부는 "전자무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수 1인당 500명, 총 1만 명의 전자무역 인력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워 두고 있다"고 밝혔다.

㉹ 2001년 제 1차 인적자원 개발 회의 개최

정부는 3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13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완상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재로 2001

년도 제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방향과 인적자원 개발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현재 세계 27위권인 우리나라의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을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오는 9월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립하기로 했다.

기본 계획에는 ▲창발적 온정적 인간 육성을 위한 실업계 고교 운영체제 개편과 조기 영재 교육 체제 구축, 교육 재정 확대 등 초중등교육 내실화 ▲세계 수준 연구 인력 양성과 국립대 운영체제 효율화 등 고등교육 역량 제고 ▲평생 직업교육 훈련 체제 구축 ▲정보통신(IT)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중도탈락 청소년, 특수교육 대상자 등 소외계층 인적자원개발 등 정책 과제가 포함된다. 아울러 ▲여성 인적자원 양성 ▲지역 단위 인적자원개발 ▲문화 시민 의식 제고 ▲북한과 외국 등 국제 인력 자원 교류 협력 강화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 모두 10개 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 부총리 외에 이근식 행정자치, 김영환 과학기술, 김한길 문화관광, 양승택 정

보통신, 전운철 기획예산처, 한 명숙 여성, 장제식 산업자원, 김호진 노동부 장관과, 이정재 제경차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정순택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앞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이미 확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닌 장관들간 정책 토론과 실질적인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 기여입학제 불허 방침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월 25일 KBS 1TV '정책진단'에 출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민 정서는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 대학가고 누구는 그 반대라서 대학에 못 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사립대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지원자가 물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금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이도 상향 조정과 관련, "너무 쉽게 출제됐던 지난해의 실수를 바로잡아 조금 어렵게 내는 것이므로 난이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교육 이민'에 대해

"교육 이민을 간 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0.08% 수준에 불과한데 언론에 다소 과장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사학의 민주성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법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해 한 장관은 "교원 정년 단축으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 가슴 아프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정년을 환원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IT 대학 및 투자사 설립법 제정

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대통령 직속의 정보통신(IT) 산업 자문회의 설치, IT 전문대학 및 투자회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정보기술기본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HPC법, IT기본법을 근거로 강력한 IT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듯이 각 부처에 산재한 IT산업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 계획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IT 산업 자문회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며 IT 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 및 성과 평가, IT 산업 백서 발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IT 전문 대학 설립,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IT 전략본부' 설치, 입주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주는 'IT 진흥구역' 지정 등을 기본법에 담기로 했다. 정통부는 4월 중 법안을 마련한 뒤 5, 6월 관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2002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5일 2002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5월 10일까지 각 대학의 정원 조정계획을 받아 6월말까지 대학별 입학 정원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 161개 4년제 대학 중 26개 국립대는 종합발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수도권 사립대도 인구 억제 차원에서 정원을 묶되 학교 특성화와 첨단분야 등에 한해 최소한의 조정만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는 교원, 교사(校舍) 확보율 등 증원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정원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편입학 등으로 자

퇴 휴학생이 많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증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 사립대의 증원은 입학 정원 기준으로 교원 교사 확보율을 각각 65%이상으로 했지만 2002학년도에는 증원 기준을 입학 정원이거나 재학생 기준 중에서 대학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원 정원은 대학원별 입학 정원 범위에서 자율 관리하도록 하되 2003년부터 증원 기준(현재 확보율 70%)을 해마다 10% 포인트씩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일반 대학원은 교원 확보율을 현재 60%에서 65%로 높이기로 했다.

☪ 국가공인 민간자격자 대입특별전형 자격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으로 올해부터 첫 국가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 민간 자격을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해 대학 입시 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는 데다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인정도 해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종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7개 부처 11개 기관 28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공인유효기간 안에 28개 민간자격을 딴 사람은 앞으로 대

학 입시에서 대학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지방 사립대 설립인가 조건 완화

앞으로 지방 사립대학은 학교 설립인가에 필요한 전임 교원을 개교 후 4년 이내에 확보하면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일 학교 설립인가 요건 중의 하나인 전임교원 확보의 경우 인가시 2분의 1을 확보하고 개교 후 1년 이내에 나머지를 모두 갖추도록 한 것을 학생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많은 현실을 감안, 완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지방 사립대의 제정 지원을 위한 대학 법인 및 학교 평가시 교원 확보율과 관련, 기준을 편제 정원으로 하던 것을 등록 학생 수로 했다.

☪ 교원 부전공 연수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4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의 관리 및 평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수 과목별로 과락점수인 60점 이하를 주지 않아 사실상 연수에 참가하지만 하면 부전공 자격

을 딸 수 있었던 관행에서 탈피, 과목별 60점 이하는 과감히 탈락시킬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현재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 21학점을 따면 되는 이수학점 기준도 30학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전공 연수는 교과목간 수요 불균형으로 남는 과목의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다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도 해마다 5천 여 명이 연수를 받는다. 이 밖에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른 학생 징계 및 유급, 편입제도 개선, 교교 내 신성적 관리 엄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내 출장 공무원 숙박비 및 시간강사로 내년 인상

내년부터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 때 숙박비가 10~13.6% 오른다. 국립대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시간당 2만3천원에서 3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예산처는 3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된 '2002년도 예산안 편성기준 단가'를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처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대부분의 예산기준 단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시키기로 했지만 인상이 불가피한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시

간강사의 강사료만 조정했다. 공무원들이 국내 출장을 갈 때의 숙박비는 하루 기준으로 1~3급은 올해의 4만1천원에서 4만6천원으로 오른다. 4~5급은 2만2천원에서 2만5천원으로, 6급 이하는 2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차관급 이상의 숙박비는 따로 정해진 게 없다. 국립대 외래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생활 유자가 힘들 정도로 낮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에는 시간당 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시간강사 처우 적극 개선 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11일 민주당, 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교원 정년 환원(65세) 혹은 재연장(63세)을 추진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년을 현행대로 62세로 고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완상 부총리, 민주당 김성순, 자민련 조희옥 제 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올해 정규 교사 부족 인원 2천337명은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충당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과전담 교사의 학급담당교사 전환에 따른 교사 부족은 강사를 활용해 매우으로써 기존 교사의 수업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도서, 벽지지역은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교원 수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는 최근 여야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제출해 상임위에 계류 중인 교원정년 환원·연장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당정은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책으로 국립대의 경우 시간당 2만3천원인 강사료를 내년부터 3만원으로 올리고, 사립대도 처우개선을 독려함으로써 대학평가 지표 중점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시간강사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과 퇴직금, 연금 혜택 부여를 검토키로 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대학원 무인가 설치 및

정원 초과 집중 조사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9일 "최근 대학들이 정부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증원 신청도 하지 않고 무인가로 대학원을 설치하거나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모집, 학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학위를 남발하고 거액을 챙기고 있

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달 중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학부 과정 없이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해 위법 소지가 가장 많은 18개 대학원대학은 물론 일반대학원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월 경기도 H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이 대학이 지난 '87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도 받지 않고 목회대학원을 운영해 모두 760여 명의 석사를 배출한 것을 적발했다.

또 대학원대학 가운데 '99년 3월 개교한 서울의 K대학은 입학정원이 석사과정 33명, 2000년 석사과정 48명에 불과했는데도 '99년과 2000년에 이 정원 이외에 '연구과정생'으로 매년 200명 이상을 선발, 논문 심사를 통해 졸업증서 형태로 석사학위는 물론 학사학위까지 줘 교육인적자원부가 조만간 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일반대학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학원 위치를 변경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여 적발되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무인가 대학원이나 정원 초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으면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 박사과정 진입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 환경 개선 추진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고층 빌딩형 학교나 수영장 같은 사회체육 시설을 갖춘 복합형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대거 들어선다. 또 신도시 등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등은 개발사업계획 승인 때 학교 용지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확인과 조치가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13일 열린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용지 확보 등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교 부족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신·증설 때 운동장 없이 고층 건물에 실내 체육시설을 갖춘 '빌딩형 학교'와 12~18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 건축을 확대한다.

또 1개 부지에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가 들어서는 '단지형 학교'와 공공기관 또는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수영장이나 체육관 등 사회체육시설과 학교 건물을

복합화한 '복합형 학교' 건축도 늘릴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개발사업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이 없는 난개발이 초래되는 등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지자체-교육공간 협조 체계 등을 통해 신도시 주변의 학교 용지 부족과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생 중소기업 봉사 활동 적극 검토

재정경제부는 4월 17일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생들이 중소기업 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다소 해소하고 대학생에게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올해 여름방학 때 시·도별로 1~2개 대학씩을 선정, 총 500~1천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봉사 활동에 참여

하는 대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하거나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5월 중 대학생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0일 실업대책 차관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업종은 첨단 정보기술(IT) 분야보다는 주로 전통 제조업 쪽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IT 과목 대학 '교양필수' 추진

인터넷 기초 언어체계인 자바(JAVA)와 HTML 등을 공부하는 정보통신(IT) 과목이 내년부터 각 대학의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절대 부족한 IT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생들에게 IT과목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이수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최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4월 17일 밝혔다. 또 정통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IMT-2000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각 대학에 IT 시설 및 장비와 교수 인력

확보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각 대학이 전공에 관계없이 이수할 수 있는 IT 과목을 자율적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컴퓨터 관련학과 학생들에 대해선 IT 외국공인 자격증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IT 과목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 외에 IT 관련 과목을 늘려 전공 학생이나 비전공 학생 모두 IT 과목을 다양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IT 대학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학생들의 취업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대 전임교원 2004년까지 2천명 증원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월 24일 청와대에서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을 매년 약 700명 내외씩 총 2천명을 증원하고,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를 현재 2만7천원에서 3만4천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간강사 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통해 현재 65%에 불과한 국립대의 교수 확보율을 2004년까지 75%로 끌어올리기로 했으며, 사립대도 유능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올해부터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중 일부를 선발해 1인당 연간 최고 3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학술연구교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올해 5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뇌한국(BK)21 사업 추진을 위한 신진 계약교수를 연간 1천100명씩 선발해 1인당 1천500만원씩 오는 2005년까지 990억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연구과정생(일명 포스닥) 200명에 대해 연간 1천600만~2천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사립대 시간강사에게 퇴직금과 연금 수혜 혜택,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등 시간강사의 신분 안정과 지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임교원 증원을 위해 600억원, 시간강사료 인상을 위해 150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간강사료 인상은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적용된다. 올 현재 전

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4천646명으로 전체 대학 강의의 38.4%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박사 학위를 갖고 다른 직업이 없이 시간강사 직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전업 시간강사'는 9천197명으로 20.6%에 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업 시간강사의 수입이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학기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30대 이상 전업 시간강사가 7천496명으로 대부분이어서 우선 이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박사 인력의 수급 조절과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올해부터 '대학원 총괄 정원제'를 도입, 학생 지원이 많은 전공에 정원을 많이 배정해 사회적인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완화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5일 대학 평가 기준을 기존의 학생 정원 기준에서 등록 학생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중 개정령안이 5월 초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휴학생이 많아 재학생 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또 규정 가운데 대학을 설립한 후 1년 이내에 전임교원을 확보토록 하던 조항도 4년 이내에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된다. 아울러 대학 설립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수익용 기본 재산 등의 보유 현황과 학교 현장을 공표하도록 했다.

☪ '연구비 카드제' 전면 재검토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4월 23일 정부 출연 연구소에 대해 연구비 집행을 카드로 하도록 의무화한 '연구비 카드제'와 관련, 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구비 카드제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및 자존심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제도를 대폭 보완하거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연구비 카드제는 예민한 시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제도"라고 말해 시행을 유보하거나 백지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구비 카드제는 연구비의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일선 연구원들은 "출연 연구소의 경우 모든 연구비가 회계과를 통해 집행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며 오히려 교수 개인 통장으로 정부 예산이 입금되는 대학에 먼저 도입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정년 단축과 구조 조정으로 연구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정부가 카드제까지 도입해 과학기술자를 불신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긴

것은 잘못이라고 연구원들은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대덕밸리의 벤처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소 간 인력 및 장비의 교류가 이뤄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